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최명선 | ⓒ 승인 2013.04.09 17:27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2013년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주요 슬로건은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이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중대재해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여수, 구미, 청주, 울산등 국가산업단지의 연속적인 사고로 국가산단의 위험성과, 자본의 위험 업무 외주화로 산재사망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시 삼성의 은폐와 무더기 법 위반이 드러나고, 민주노총의 산재사망 처벌 강화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로 “산재사망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큰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 11년간 2만7천3백7십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 나갔다. 매년 2,488명이 11년 동안 죽어나간 전쟁 같은 죽음의 일터... 코레일, 이마트, 대우조선 해양, 현대제철... 재벌 대기업의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죽어나간다. 그러나, 사업주 벌금은 몇 백만원 수준이고, 실형을 선고 받은 기업은 단 한 건도 없다. 더욱이, 하청 산재사망에 대해 원청은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고 있다.

2003년에 호주와 캐나다가, 2007년에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캐나다에서는 금속노조가, 호주에서는 건설노조가 법 제정을 주도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을 통해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 투쟁을 본격화 한다.

올해는 민주노총이 마련한 법 제도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투쟁, 현장 투쟁, 대 시민 투쟁을 본격화 한다. 현장 조합원 투쟁의 발판 마련을 위해 조합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으로 1노조 1교육을 실질 추동하고, 지역본부별 추모제, 집회, 살인기업 선정식, 토론회, 사진전 등과 4월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산재사망 시민 추모 문화제”는 천주교, 조계종 등 종교계가 주최하는 추모행사로 확대된다. 또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신의 빈자리” “나는 솜방망이 산재사망 처벌을 반대 합니다”는 다양한 온라인 행동, 추모위원 조직사업이 전개된다.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비 고
4월 30일	1노조 1교육/ 현수막 걸기/조합원 선전물 배포	단위노조
4월15~30일	- 산재사망 추모아주라 콘서트 - 산재사망 처벌강화 토론회(4/24) - 병원 여성 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4/29)	총연맹/ 대책위(준)
4월22~28일	- 지역별 산재사망 추모제, 노동청, 근로복지공단집회	각 지역본부 주관
4월26일	-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오후 3시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민주노총

4월22~28일	- 4.28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시민 추모위 기자회견 - 온라인 행동. 428safedu.org - 산재사망 릴레이 콘서트 - 찾아가는 건강권 강좌	시민추모위원회
4월25일	- 살인기업 선정식(서울) / 오전 10시30분 청계광장	산재사망공동캠페인단
4월27일	- 2012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제 오후 5시 서울	총연맹 시민추모위원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최명선 kctuedit@nodong.org